

光州日邦



광주·전남 '에너지 신산업' 어쩌나…

정부, 경남 조선업 사업다각화 업종 에너지 설비·부품산업 결정 업종 겹쳐 보조금 확보·기업유치 어려움…전략산업 육성 타격

산업통상자원부가 울산, 거제 등 경남지역 조선업의 사업다각화 업종을 에너지설비·부품산업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논란이 일고 있다. 에너지신산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추진중인 전남도가 당장 정부지원이 줄어들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있기 때문이다. 에너지저장(ESS 등), 에너지변환(태양광 등), 에너지활용(지열 등)등에너지산업육성에 나선 광주시도 산자부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전남도는 12일 "산자부가 최근 조선업의 사업다각화를 위한 대체업종으로 에너지 설비·부품산업으로 정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며, 추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지난달 말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제정·고시에 따라 사업다각화를 추진하는 조선기자재업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관련 규제도 완화해줄 방침이다. 사업다각화란 ▲조선기자재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 운영 ▲기존사업의 규모를 축소·유지하면서 추가업종의 매출액이 투자완료일로부터 3년이내에 총매출액의 30% 이상 증가 ▲기존에영위하던 업종 중조선기자재업이 아닌 업종의 매출액 비중이 투자완료일로부터 3년이내에 30% 이상 증가하는 투자가해당된다. 지난 5월부터 조선업의 사업다각화대상업종을 물색해왔다.

4 대중 급증을 출격에었다. 산자부는 울산 등 경남지역에 원자력·

내년초 1억4천만원 용역 발주

광주시 자치구(區)간 경계조정이 본격

광주시가 자치구 재조정을 위한 연구용

역을 실시하고, 정치인·전문가 간담회 등

을 여는 등 구간 경계조정을 위해 본격적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조속히 자

치구간 경계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

〈광주일보 5월24일자 1면〉과 함께 지난달

국민의당 광주시당이 처음으로 정책토론

시의회에 특위설치 제안

인 행정 절차에 나서기로 했다.

화된다.

광주시 자치구 경계조정 본격화

선 것이다.

화력발전단지가 조성돼 있는데다 조선업 양태가 발전산업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향 후 신규 발전시설 건설 및 수요가 있을 것 으로 보고 에너지 설비·부품산업을 대체 업종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부 관계자는 "광주시와 전남도가이에 대해 반대하고 있지만, 에너지신산업과 에너지 설비·부품산업은 엄연히 다른산업"이라며 "세부적인 내용이 공개되지못하면서 빚어진 오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남도는 에너지신산업에 향후 10년간 16조5000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육성하기로 하고 관련 연구기관·기업 등의 유치에 나서고 있는 마당에 이 같은 정부 조치로 자칫 예산 수급, 기업 유치 등에어러움을 겪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에너지신산업은 미래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분야가다를 수 있지만, 에너지 설비·부품산업이결국 에너지신산업의 기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에너지산업 관련 당분간 정부 예산이 경남지역으로 집중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남도의 우려다.

임채영 전남도 경제과학국장은 "산자 부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으며, 지난해 말 지역전략산업으로 에너지신산업이 정 해진 만큼 정부의 지원과 지역역량을 집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광주시와 함께 산자부의 향후 조치를 살펴보고 대책을 마 련하겠다"고 말했다.

회를 여는 등 지역 정치권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면서 광주시가 구체적인 행동에 나

광주시는 12일 열린 시의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빠른 시일 내에 생활권과

경제적 파급효과, 미래 성장동력 등을 고

려한 장기적이고 대폭적인 자치구 재조정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할 계획이

다"고 밝혔다. 시는 자치구간 경계조정 용

역을 위해 1억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 내

년초 발주하기로 했다. 용역은 5~6개월

시는 또 용역과는 별도로 구청장, 지방

의회,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학계 전문가

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울긋불긋…캠퍼스에 물드는 가을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해지는 등 가을 날씨로 접어든 11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교정에 단풍나무 이파리들이 울긋불긋 물들어가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간담회와 도시균형발전위원회 경계조정 분과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 획이다. 아울러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설명회, 위원회 운영 및 기본계획 수립 등 구간 경계조정 업무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구도 검도야기도 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당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 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現 공공기관장·상임감사 영남 출신 159명 압도적

더민주 김종민 414명 전수조사

현직 공공기관장과 상임감사의 영남 과 서울대 출신 인사 비율이 압도적으로

호남 59명의 3배 육박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실이 국내 320개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상임 감사 414명을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역별로 서울과 대구·경북(TK) 출신이 각각 84명, 8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경남(PK) 출신이 77명, 대전·충남이 42명, 광주·전남 32명, 전북 27명, 강원 21명 등 순이었다.

TK와 PK를 합친 영남권 출신 인사는 모두 159명으로, 전체의 3분의 1을 훌쩍 넘는 38.4%나 됐다. 이는 전남·북을 합친 호남 출신 인사(59명, 14.3%)의 3 배에 육박하는 수치다.

출신 대학별로는 서울대 출신이 113명으로 다른 대학 출신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연세대 출신이 34명, 고려대가 30명이었다. 성균관대와 한양대 출신은 각각 20명, 17명을 기록했다. 서울대 졸업생 중에서도 영남 출신이 45명으로 서울(29명) 등 다른 지역보다 많았다.

고위공직자 지름길인 고시 출신별로는 행정고시가 66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술 고시가 16명, 사법고시 10명 등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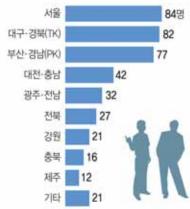
출신 고교별로는 경기고가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 경북고가 22명, 서울 고가 16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고교평준화가 전면 시행된 1977년 이후 의 경기고 졸업생은 2명, 경북고는 4명, 서울고는 1명밖에 되지 않았다.

또 현 정부에서 청와대 근무를 거쳐 현재 기관장이나 상임감사 자리에 앉은 인사가 15명이나 돼 '낙하산 인사' 논란 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창석 서울대병 원장과 김재춘 한국교육개발원장, 백기 승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민무숙 한국양 성평등교육진흥원장, 최성재 노인인력 개발원장, 주철기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등이 이에 해당된다. 정동활 인천항보안 공사 사장과 최기호 부산항보안공사 사

의인 홍남순과 광주 5·18 ▶6면 그림 편지-송필용의 진도 ▶18면

가을야구 박수 받은 KIA ▶ 20면

공공기관장·상임감사 출신지



장, 전병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상임감 사, 박용석 인천국제공항공사 상임감사 등 4명은 나란히 대통령 경호실 출신이 어서 눈길을 끌었다.

자료/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신으로 도 인요한 국제보건의료재단 총재와 윤 주경 독립기념관장, 유길상 한국고용정 보원 원장, 김현장 한국광물자원공사 상 임감사위원 등 6명이나 있었다.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와 박병문 한국투자공사 감사, 이문수 한국국토정 보공사 감사, 이규양 한국농수산식품유 통공사 상임감사 등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에 몸담은 경력이 있 다. 서울대 병원장을 지낸 성상철 국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 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특정 지역에 편중된 정부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을 공공기관 임원으로 낙하산을 보내는 행태를 이젠 끝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조대부고 총동창회 친선 체육대회

막는 것 산이거든 무느곤 못 가랴!

- ■일시:10월 16일(日) 9:30~
- ■장소:**모교 운동장**
- ■전화: (062)**224-1461**

